

자유화와 정유업계의 과제



洪贊基
〈석유협회 부회장〉

지

금 정부는 동력자원부 출범 초기인 '8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오던 석유산업 자유화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자유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현황과 자유화에 따른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화 계획과 업계의 현황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는 크게 가격부문, 수출입부문, 유통시장 부문, 그리고 정유업 신규참입부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정부는 1단계로 '97년부터 정유업 신규참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고 이어서 99년부터는 석유산업 전 부문을 자유화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정유업계의 시장 경쟁은 심화일로에 있어 자칫 사간의 감정적 대응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산업전반에 걸친 자유화 계획과는 반대로 환경규제는 강화일로에 있는 것이 국내 외적 현실입니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97년 부터는 현재 0.2%인 저유황 경유와 1.0%인 저유황 B-C유의 유황 함량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더욱 낮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96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제도도 확대하여 기준량 이하의 오염 물질 배출시에도 기본 배출 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이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유공장의 저장시설, 출하시설, 주유소의 주유시설,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회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98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하루 약 180만배럴의 정제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업계는 이를 '97년까지 244만배럴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유업계는 '97년말 정제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약 9,400만배럴의 저장시설이 요구되는 바 약 5,200만배럴 규모의 시설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5,200만배럴 규모의 시설은 현재 저장시설 건설비를 1배럴당 15달러 수준으로 계산할 때 7억8천만달러, 약 6,200억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부지 가격까지 합산하면 그 비용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석유의 유황함량규제에 대비하여 고도화 시설을 확충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더욱 많이 부담하여야 하며, 저유시설의 확대 등 정유업계의 비용부담은 간단없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확장에 최소한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유화 전후의 심각한 시장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맞물려 정유업계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과제

자유화는 국내 석유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화된 시장에서 국내외 업계간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경쟁의 완화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화·개방화를 목전에 두고 국내 업체간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경쟁은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확대·유지가 기업의 목표이며 사활이 좌우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위적 조정은 불가능 하겠지만, 경쟁의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업계 스

스로 선의의 경쟁, 생산적인 경쟁을 위해 대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 완화를 위해 이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일본에서는 '96년 4월부터 특석법(특정 석유제품수입 짐정조치법)을 폐지하여 휘발유 등 경질유의 수입을 자유화할 것입니다. 일본의 全農은 이를 계기로 원매회사로의 도약과 한국으로부터 휘발유 등 경질유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農 이외에도 일본의 종합상사를 비롯한 여러업체가 제품수입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업계는 일본으로의 제품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중국도 이미 '93년부터 석유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품수입을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생산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경질유제품 수요증가 등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진행중인 정제시설의 확장, 고도화 시설의 신·증설, 환경관련 시설투자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생산수율에 비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질 저유황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유황, 경질 원유를 도입하여 정제하거나 이를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고유황 연료 유 사용규제와 잉여 중질·고유황 제품의 처분에 문제가 있고, 필요한 물량의 적기확보와 가격의 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되며, 또 근본적으로 경질·저유황 원유의 공급 부족으로 수급상 애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중질유를 분해하거나 탈황하는 2차시설의 건설 뿐입니다. 현재 우리 정유업계는 '97년까지를 1차 목표로 4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28만4천B/D의 중질유 분해시설과 19만5천B/D의 중질유탕활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고도화 시설의 건설은 수요구조의 변화와 환경규제의 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국내정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나 국민여론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후손에 물려 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정유업계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정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앞서 말씀드린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석유가격의 추가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째로 비축·저장시설 등 물류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석유수송 수단중 송유관 수송능력은 총수송물동량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거의가 유조차와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선박의 노후화, 항만시설의 한계 그리고 외국적선용선의 규제등으로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정제시설의 증설이 완료되는 '97년 말까지 대대적인 비축·저장시설 확장을 하여야 합니다. 비축·저장시설은 공장내의 잉여부지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도시 인근 지역의 이용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 조성되는 공단 부지중 일부를 비축·저장시설용으로 할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곳에 업계공동의 시설이 설치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유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원유공급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세계 석유부존자원의 76.5%를 OPEC가 점유하고 있고, 세계 총매장량의 65.8%가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계원유생산을 보면 '85년 29.6%에 불과하던 OPEC의 비중이 '94년말 현재 41.5%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잠재적인 종교적·민족적 갈등은 이같은 자원의 편재성과 함께 석유의 구조적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동구, 중국, 러시아등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불안에 따른 석유수요의 급증세도 중장기 석유공급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제3차 석유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향후의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외 유전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자주개발원유의 도입비율을 늘리고, 매장량이 많은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석유비축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는말

자유화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정유업계는 스스로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십년간 정부의 규제하에서 성장해온 업계의 경쟁력은 외국의 거대석유기업과 비교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산업의 자유화, 개방화에 앞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이 세심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